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2차 한미 FTA 협상을 마치고 계란 수입 가능성 세심히 검토해야

한미 FTA 2차 협상이 지난 7월 10-1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농업분야에서 양국 대표들은 농업분야 협정문, 농산물 수입관세, 수입쿼터 방식, 관세철폐 이행기간 등과 관련하여 논의를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오는 9월 4일 미국(장소미정)에서의 3차 협상 개최를 앞두고 8월중순 이전까지 상품, 섬유, 농산물의 관세양허안을 일괄 교환하기로 합의키로 하였다.

농림부는 농업분야 1,452개 품목에 대해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긴급관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품목 특성 및 시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입쿼터 관리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측에서는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수입쿼터 방식에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양보없이 합일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협상기간 동안 선 대책없는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양계분야에서는 이미 닭고기가 수입되는 상황에서 20%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시장의 피해는 명약관화 한 실정이다. 또한 그 피해 규모도 농경련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정도가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계란에 대해서는 원란의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미국의 계란가격을 보면 1등급 대란의 경우 5월 18일 28원, 6월 1일 47원으로 국내 가격에 비해 절반 가격에 형성되고 가격 등폭도 2004년 3월에는 94원, 9월에는 33원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거대 양계업체에 국내 계란시장 개방시 냉동콘테이너로 18일이면 도착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관계자의 입장은 사뭇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육종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 계란이 한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일본과 같이 가공산업의 비율이 낮으며, 원란의 경우는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는 있지만 미국의 백색란 생산 비율이 93%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갈색란을

100%소비하는 한국시장에 미국의 백색란이 수입되어 소비되기는 극히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보다 철저한 조사와 관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를 위한 생산자 단체의 역할 닭고기 생산업체 공정거래법 위반을 바라보며

지난달 20일 국내 언론매체들은 '닭고기 값이 왜 비싼가 했더니...'라는 제목으로 2004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파문 이후 닭고기가격 급등은 업자들의 담합 때문이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계육협회와 H사를 비롯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에 대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 4개월간 도계육 가격과 삼계시세, 육가공품의 최저 공급가격을 담합한데 대해 27억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6개 업체중 담합을 주도한 4개사에 총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닭고기 가격 인상을 방조하고 시세를 고시한 한국계육협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2004년 3월부터 사장단회의를 비롯 각종 사모임을 통해 생닭 가공용품을 kg당 201원(21%)가량 올리고 출고량을 조절했으며, 이후 전 계열사들이 참여하면서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육협회와 닭고기 생산업체들은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림부가 적극 개입해 수급조절을 해오는 품목이므로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계열업체들은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삼계가격과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이외의 가격과 물량정보를 교환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한국계육협회는 시장에 거래되는 도계육 및 삼계의 가격과 거래물량 이외의 가격·물량에 대한 정보를 게재·고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즉,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이 안 된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다.

계열화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생산자 뿐만 아니라 많은 계열사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고, 부도가 속출하였다. 하지만 양계관련인 및 전 업계의 노력으로 다시 육계산업이 2003년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상 회복이 된 시점에서 사육수수료만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고, 생산자들은 Si이전의 계약조건 회복과 부당이익에 대한 환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계열사들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육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개최된 본회 이사회에서도 육계사육비에 대해 현실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으며, 육계분과위원회에서는 모 계열사의 자체 생산농장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자칭 생산자단체임을 표명하고 활동하는 한국계육협회가 진정한 생산자를 위한 생산자 단체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식품안전처 설치 왜 서두르나?

식품업무 농림부 일원화 아무런 문제없다

최근 식품안전처 설치를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왜 식품안전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굳이 총리실에 이 기구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만두사건, 김치 기생충알 사건, 수산물 마라카이트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 식품위생 문제가 터지면 이를 맡아 처리할 조직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비중을 두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등 많은 선진국들이 이 업무를 농림부에서 일괄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체계가 비슷한 곳은 미국과 일본으로써 큰 무리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식품관장업무는 33개 지방정부 및 11개 소비자단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찬성에 힘입어 현재 축산물에는 사육에서 유통보관까지 농림부가 담당하고, 기준 및 규격제정, 검사 등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현 식약청을 해체하고 약품업무는 보건복지부로 환원하고 식품업무는 신설조직과 합쳐서 총리실에서 관장하며 사육과 생산은 농림부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식품안전처가 설치될 경우 농림부, 해양수산부, 복지부 등에서 900여명을 차출하여 신설부처를 만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따라 공무원을 다시 총원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증가만을 낳게되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청와대나 총리실은 각처 장관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휘부지 실제 업무를 담당해서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식품관리감독 업무는 식품안전처에서 하고 사육생산은 농림부에 위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원화되어 현재와 다를 것이 없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꼴이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농림부에서 일원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즉,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방식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DDA/FTA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 허탈감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고, 식약청에서 최종검사를 맡아줄 경우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도 없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농림부 산하에는 식품안전전문가가 1,150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지는 이번 문제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양계**